

'평화' 올림픽 유산 남겨 지구촌 감동

광주시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사업 확대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서 찾다

<3>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

평창 기념재단 설립해 레거시 창출
 평화포럼·평화테마파크 등 추진
 3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고심
 광주도 계획 잘 세워 교훈 남겨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키워드로 남과 북이 손을 잡은 대회로 기록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이끌어 내면서 올림픽 취지에 가장 맞는 대회가 됐다. 북한선수단 참여와 남북단일팀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평창의 경험은 많은 교훈을 남긴다.

◇'평화' 레거시에 집중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해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등 일원에서 15개 종목으로 92개국 292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조직위는 해산이후에도 대학체육회와 손을 잡고 올림픽 유산창출을 책임질 평창 기념재단 설립에 나섰다. 지난달 25일에는 평창 기념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해 유승민 IOC위원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올림픽 잉여금(추산 619억원)으로 재단을 출범시켜 대관령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 천창호 단장은 "대회 이후 평화의 시작은 평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무형의 레거시로 평창 평화포럼, 평화특례시, 유형으로 평화테마파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조직위는 대부분 철거된 올림픽 개·폐막식장의 시설 가운데 분관 건물을 활용해 올림픽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청은 올림픽 기간에 사용한 국제방송센터는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동계스포츠 훈련센터로 재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고심
 평창은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13개 시설 가운데 10개 관리주체와 사후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신축 경기장 7개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등 일반인

이용이 힘든 3개 전문 체육시설은 사후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3곳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문체육시설로서 아직까지 사후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임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며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종료된 1년이 지나면서 경기시설 등 사후관리에 대한 막대한 유지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올림픽 경기를 치른 13개 경기장과 지원시설, 부지매입, 개보수, 신축비용으로 8천807억원이 투입됐으며, 부대시설 건설비 1조1414억원, 교통망 건설에 9조2024억 등 총 11조2245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대회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계획 및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레거시의 사후 관리방안으로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강릉시에서 관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동 하키센터는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관리,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 복합 체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쇼트트랙 보조경기장은 영동대학교에서 관리해 전시회, 콘서트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활용계획을 세웠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강릉 컬링센터는 강릉시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휘닉스 경기장은 ㈜보광에서 코스 난이도를 조정해 일반인에게 개방,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용평리조트에서 기존 스키장 시설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시설, 강원도개발공사 위탁 운영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관리해 국내의 동계스포츠 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1년 운영예산은 약 14억원 수준이며, 신규 빙상 경기장인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하키센터 3개 경기장의 운영예산은 약 40억53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산림레포츠시설, 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단지로서 복원될 전망이다.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 천창호 단장은 "올림픽이 끝나고 개폐막장이 철거돼 일부 시설만 남아 있다"라며 "올림픽 준비기간에 지원금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특별법이나 지원근거가 없으면 레거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13개 시설 가운데 10개 관리주체와 사후활용방안을 확정했지만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등의 사후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키점프대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단 제공>

외국인 대학생 인권조사 등 14개 사업 지원

광주시가 인권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17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사업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외국인 대학생 인권실태조사, 인권감수성 심화를 위한 시민인문교육, 북한이탈주민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사업 등 총 14개로, 사업별로 4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3개 사업, 90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사업수와 지원규모 모두 확대된 것이다.

먼저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자

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풍두레는 직접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권강사 양성 과정, 인권활동가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를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시민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감시, 성매매 당사자 인권작품 전시회, 월 1회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홍보사업 등을 진행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 이주여성 정책관련 부서에 제안한다.

광주시민방송은 이주민 및 외국인 대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제도, 문화의 차이점 등을 라디오 다큐,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및 외국인 대학생의 인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선정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인권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역량 있는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향토기업 보해를 사랑해 주세요"

유성수 도의원 임시회서 호소

전남도의회 유성수(민주당·장성1) 의원이 11일 전남도의회에서 향토기업 '보해'를 살리자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 33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해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남의 향토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해양조는 2011년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30~40%로 추락했고 2018년 영업실적 또

한 적자"라며 "보해의 위기는 불황의 장기화,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혼술로 대표되는 음주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유들이 있지만 지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지역민이 찾아 주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과거 보해는 잘못된 사업확장으로 지역민들에게서 상처도 주었으나 흠이 있다고 자식을 바꿀 순 없지 않겠느냐"고 "향토기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역민들 자존심에도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섬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전남도, 50% 국비 지원

전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개 섬, 5만 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남도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해 6월 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용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동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일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호응

용산교 등 4곳 운영...970명 이용

광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광주전면에 위치한 용산교, 동천교와 영산강변에 위치한 극락교, 산동교 등 4곳에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점터미널에는 운영 첫 날부터 3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으며, 2주간 총 97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3일부터는 승촌보, 첨단교, 어등대교, 중앙대교 등 4곳에도 거점터미널을 확장 운영한다. 각 거점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돼 혹서기인 7~8월

을 제외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전거 무상 수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동천교, 첨단교, 산동교, 중앙대교, 어등대교 등 5곳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거점터미널이 시민들로부터 시작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